

# 송영길 '총선 필승' 내걸고 당권 도전... 당은 선호투표 공방

민주당 내 세 번째로 출마 선언  
'이심송심·당청동색' 핵심 기조  
'선호투표제' 두고 친명·친청 이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자신이 "총선필승 대표카드"라며 8·17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표를 던졌다. 국회 최다선(6선)인 송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 세 번째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으며, 차기 당 대표의 시대적 과제를 "이심송심(이재명의 마음이 송영길의 마음), 당청동색(黨靑同色)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2030세대 청년과 함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다. 70%에 육박하는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당은 압승에 실패했다"며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왔다. 위기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해법도, 우리 안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권여당다운 책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 실력을 보여드려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땀땀 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 저 송영길이 만들겠다"며 당정일치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친명(친이재명)계는 정청래 전 대표가 이끈 민주당이 청외대의 잇박자를 내왔다며 비판해온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은 "정권 재창출이 없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

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누가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이끌어내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 사람인가,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얼굴로 총선을 치러야 하겠나. 총선의 필승카드, 송영길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애로와, 국정에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원전 민주당,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민주

당, 가슴 뛰는 승리의 역사를, 저 송영길 이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청(친정청래)계 측은 당 대표 당선자 결정 방식으로 결정된 '선호투표'에 반발했고, 최고위원회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선호투표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운 최고위원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실무적으로 선호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국회)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 투표를 하고 있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이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룰을 갖고 시비를 할 생각이 없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이 부분은 전준위나 최고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 "존중한다. 결선투표 방식의 하나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사표 방지 심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모두가(후보에게) 1표씩 찍는다면 두 사람이 좋는데 사표가 되지 않을까 하던

지지자들의 고민을 해소해준다. 누구든지 1등과 2등을 찍으면 합산해서 과반수가 당선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송영길을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선호투표는 3인 이상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하고 최하위 득표자가 받은 2순위 표를 확인해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한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가 가까운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 최하위 득표자가 되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도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불리한 투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선출 방식 관련해서 어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1차적으로 선호투표제를 의결해서 발표했다"며 "아시겠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의 이견이 있어서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준위는 9일 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출 결정 방법을 재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7h285@metroseoul.co.kr



metro

## 법사위 대치에 멈춘 국회... 원 구성 '평행선' 李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

국민의힘, 협의 거부하며 전면 보이콧  
민주 "법안 처리 위해 본회의 개최"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원 구성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법안통과 최종관문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전면 보이콧(거부 운동)으로 맞섰다. 이 대치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국회가 사실상 '반쪽' 상태로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 캐비닛'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자리는 원내 제2당이 담당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국회 관행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며 "(그러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원 구성에 협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되면 투쟁 자체가 희화

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 소속끼리 만나서 조금씩 이야기는 나누고 있다"며 "중진 회의를 소집해서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해서 중진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 회의장 앞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민주당을 향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승수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협박하며 국회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실체를 똑똑히 보고 있다"며 "협상과 합의 정신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협박 정치"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에 인계해 줬던 아름다운 전통은 완전히 깨졌다"며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사법과 위원장"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진영에선 국민

의힘의 국회 원 구성 협조를 당부하며 나섰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점철됐던 전반기 국회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류된 민생 법안이 모두 처리되도록 민주당 의원 전원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위원과 소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가 멈추면 피해를 보는 건 여당도 야당도 아닌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정부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에 국회 정상화와 민생 입법 처리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 시장 변동성 점검... 국고채 발행 탄력 운영

>> 1면 '이달 중 '원화 국제화'서 계속

이에 과도한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최근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대내외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국고채 장기물 발행 비중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또 같은 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정보기술(IT) 혁명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초

격차 경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제도약 지원 대책, 철강산업 수요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25만개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에 위한 장후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소환원제철과 10대 특수강 기술개발에 국비 약 5000억원을 투입하고, AI를 통한 공정개선과 안전전자 지원도 강화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공동 연구·생산·운용으로 협력 확대  
방산기업 연 15조 규모 시장 진출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7일(이하 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과 나토의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자고 제안하며 우리 방산 기업과 기술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김해경 여사와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 편으로 7일 오후 앙카라 에센보아 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앙카라 컨벤션센터로 이동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을 추진하면서 방산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연 1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한국 방산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에 대해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나토 간 무기 체계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 포럼에도 참석해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영하는 한-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 네 번째 세션 기조연설에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력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후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 협력의 동반자로서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metro